

민주 “한덕수 ‘남는 쌀 영구매수’, 명백한 거짓말... ‘양아치’ 발표”

“한농연 연구, 최종개정안 분석 아냐”
“양곡법 반대, ‘원안 후퇴 반대’ 다수”
정황근·한농연 원장 野단독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3일 행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수순에 대해 “국책 연구원이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내용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왜곡보고하고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왜곡보고를 주무 장관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했다”고 한 총리와 정 장관의 대국민담화문 내용을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동네 양아치” “탄핵 사유” 등 날선 표현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했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과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농연) 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농연의 법안 분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는 국민들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거라고 발표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한 총리와 정 장관이 ‘영구히’ ‘무조건’ 같은 선정적이고 거짓된 단어 구사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가짜 분석자료까지 인용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백 번 양보해서 한농연 연구결과가 옳다고 해도 총리 담화문은 거짓이다. 보고서는 작년 12월14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국회 의결로 정부에 이송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라며 “한 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국회가 수정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의 대국민담화문과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주무 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가짜 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 알고도 인용했다면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서 해임은 물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재갑 의원은 “총리 담화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총리 해명을 요구해야 되고,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강하게 추궁해 필요하다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다수 농민단체 반대’가 거짓이라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35개 농업인 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다수 단체와 농민들 중에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많이 후퇴한 현재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이 다수”라며 “(민주당) 원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위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았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장관과 김홍상 한농연 원장을 내주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야권 단독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양곡관리법이 최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참한 여당 의원석과 불출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인중 차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농해수위 산회 뒤 성명을 내고 “3일간의 국회 대정부질문, 앞서 협의된 11일 전체회의에서 하루종일 정부에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있다”며 “(오늘 농해수위 단독 소집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압박해 오자 자극적인 선행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이슬기자

문 전 대통령 “당분간 민주당 포함 정치인 안 만날 것”

상황실장 지낸 윤건영 의원이 뜻 전해 박지원 등 정치인 면담 논란 의식한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정치인들을 당분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인들 안 만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저희가 별도로 해석을 붙이는 게 큰 의미 없을 것 같다”며 “언론에서 해석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하

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했다. 전달한 분도 잘못했다”며 “우리가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하인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다”며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도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히며 “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결단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격려했다”고 적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



고 당부했다는 박 전 국정원장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문 전 대통령도 당분간 정치권과 접촉 자체를 줄이려 한다는 해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주정공장수용소를 방문한다. 이후 정치인들과의 만남 없이 희생자 유가족들만 만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尹 취임 1주년, 5월초 ‘용산공원’ 문 연다

대통령실·국토부, 시민 초청 준비 작업 중 “용산공원 개방尹 약속...여러 방안 구상”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5월 초 용산공원을 개방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내 미군 부대에서 사용했던 야구장에서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 용산공원에 시민을 초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개방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아 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이전을 기념해 주민 초청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민이 초대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공원을 여는 건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현재로서는 다양

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뉴시스와의 통화에 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하며 용산공원을 시민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최소 범위에서만 펜스를 설치하고,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서울에는 없었던 50만 평의 공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용산공원을 시민에 돌려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실은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국토부는 5월 초에 맞춰 야구장 시설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부지 내 축구장 등의 스포츠 시설도 활용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